

#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

- 행정안전부, 2022. 8

## I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

- ❖ 경제활력 제고,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
  - 신성장 기술·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추진하고,
  - 물가 안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
- ❖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, 안정적인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환경 구축
  - 취득세,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
  -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보 기반 강화

정책  
목표

지역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 민생 안정을 뒷받침

기본  
방향

경제활력 제고

민생안정 지원

합리적 과세체계 구축

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 
및 납세자 친화 환경  
조성

추진  
전략

▪ 신성장 기술 등  
산업 혁신 지원  
▪ 지역 경제 활성화

▪ 물가 인상 요인  
완화  
▪ 서민·취약계층 지원

▪ 지방세 제도 합리  
화  
▪ 감면제도 개선

▪ 지방세입 확보 기  
반 조성  
▪ 납세자 권리 및  
편의 제고



## 〈 주요 개정내용 〉

## 1 경제활력 제고

신성장·친환경  
산업 혁신  
지원

-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
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 지원 확대
-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

지역 경제  
활성화

-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內 기업·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 신설
- 농·어업 경쟁력 확보 및 농·어업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연장
-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산업·물류단지 지원 연장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연장

## 2 민생안정 지원

물가 인상  
요인 완화

- 공공요금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한 한국철도공사,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원 연장
-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관련기관 지원 연장

서민·취약  
계층 지원

-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
-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확대

## 3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

지방세 제도  
합리화

-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
-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
-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
-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
-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개선

감면제도 개선

-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
-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

## 4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지방세입 확보  
기반 조성

- 신속한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한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
-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
-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

납세자 권리  
및 편의 제고

-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
-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
-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
-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

## 1 경제활력 제고

### 1. 신성장·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

#### □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(특례법)

##### 연장 + 재설계

- 기업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을 확대(10%p → 15%p)

| 구 분         |              | 현 행 (감면율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기업부설<br>연구소 | 대기업,<br>중견기업 | 취득세·재산세 35%             | 신성장·<br>원 천 기 술<br>10%p<br>추가 감면 | 감면 연장 및 확대<br><br>※ 신성장·원천기술<br>15%p 추가 감면<br>(현행 대비 +5%p) |
|             | 초기중견         | ※ 대기업의 경우<br>과밀억제권역 외 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   | 취득세·재산세 50%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취득세 60%·재산세 50%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#### □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 지원 확대(특례법)

##### 연장 + 재설계

- 창의성·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,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확대
  -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, 지역 특화 발전 촉진

| 구 분      | 현 행 (감면율)     | 개 정 (감면율)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벤처기업촉진지구 | 취득세·재산세 37.5%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35% (조례 15%p 추가 可) |

#### □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(특례법)

-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(40만원 한도) 일몰기한 연장(2년)



| 구 분    | 현 행 (감면율)         | 개 정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하이브리드차 | 취득세 100% (40만원 限) | 감면 연장 (2년) |

## 2. 지역 경제 활성화

### □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(특례법)

- 인구감소지역\* 인구 유입 ·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· 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· 재산세 특례 신설
  - \*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, 출생률 ·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· 고시하는 지역 (「균형발전특별법」 제2조 등)

| 구 분     | 현 행 | 개 정 (감면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|--|
| 인구감소 지역 | 신 설 | 취득세 100%<br>재산세 100% (5년*)<br>* 이후 3년간 50% |
|         |     | 취득세 100%<br>재산세 100% (5년*)<br>* 이후 3년간 50% |
|         |    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50% (5년)                    |

### □ 농·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연장 (특례법)

- 지역 경작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경영회생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한 한 국농어촌공사 관련 사업 감면 연장 · 확대
-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장

| 구 분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현 행 (감면율)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(감면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한국<br>농어촌<br>공사 | 농지매매사업       | 취득세 · 재산세 50%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 50%<br>취득세 50% · 재산세 75%<br><br>감면 연장 |
|                 | 생산기반시설       | 취득세 · 재산세 50%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농업인 경영회생     | 취득세 · 재산세 50%<br>(환매 시 취득세 100%) |   |
|                 | FTA 피해 농민 지원 | 취득세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생활환경정비       | 취득세 25%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농지시장안정       | 취득세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농지확대개발 토지       |              | 취득세 100%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면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임업후계자 토지        |              | 취득세 100%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면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□ 산업·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(특례법)

- 지역별 중점 산업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· 재산세 감면 연장
  - ※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산세 감면율(25~35%)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지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

| 구 분  |      | 현 행 (감면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(감면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|--|
| 물류단지 | 시행자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25% (조례 10%p 추가 可)<br><br>감면 연장 |
|      | 입주기업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35% (5년 간)                   |  |
| 산업단지 | 시행자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 (수도권 外 60%)              | 감면 연장  |
|      | 입주기업 | 취득세 50% (+ 조례 25% 可)<br>재산세 35% (수도권 外 75%) |  |

#### □ 중소기업 대한 지원 연장(특례법)

- 지역별 중소기업의 교육 · 입주 지원,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

- 지역 내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'협동화 실천계획' 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

| 구 분            |        | 현 행 (감면율)                 | 개 정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중소벤처기업<br>진흥공단 | 교육시설용  | 취득세 25%                   | 감면 연장 |
|                | 분양·임대용 | 취득세·재산세 50%               |       |
| 지방중소기업센터       |        | 취득세·재산세 50%               | 감면 연장 |
| 중소기업협동조합       |        | 취득세 50%<br>(전통시장의 경우 75%) | 감면 연장 |
| 협동화 실천계획       |        | 취득세 50%·재산세 50%(3년간)      | 감면 연장 |

## 2 민생안정 지원

### 1. 물가 인상 요인 완화

#### □ 공공요금 안정 지원 (특례법)

- 교통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
- 지방 공공요금\* 동결 등 지원을 위해 지방공사·공단 감면 연장
  - \* 대중교통(시내버스 등), 시설 이용요금, 환경미화(쓰레기봉투료) 등

| 구 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현 행 (감면율)            | 개 정 (감면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한국<br>철도<br>공사 등 | 철도여객 사업용<br>부동산 | 취득세 25%·재산세 50%      | 감면 연장 및 신설<br>※ SR 철도차량 감면<br>신설 (취득세 25%) |
|                  | 철도차량            | 취득세 50% (고속철도 : 25%) |  |
| 지방도시철도공사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 100%   | 감면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방공사<br>지방공단     | 지방공사            | 취득세·재산세 50%          | 감면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지방공단            | 취득세·재산세 100%         |  |

### □ 농·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(특례법)

- 농·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·재설계

| 구 분          |          | 현 행 (감면율)    | 개 정 (감면율)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|          | 취득세·재산세 50%  | 감면 연장        |
| 지방농수산물공사     | 고유업무 부동산 | 취득세·재산세 100% | 취득세·재산세 100% |
|              | 법인 등기    | 등록면허세 100%   |              |

## 2. 서민·취약계층 지원

### □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(특례법)

-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,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\*로 확대

\* (현행) 약 0.3만개소 ('21년 기준) → (확대) 약 1.1만개소

| 구 분  | 현 행 (감면율)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(감면율)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회복지법인 및<br>일부 사회복지시설*<br>* 양로원, 보육원, 모자원,<br>한국한센복지협회 | 취득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·<br>등록면허세·주민세 100% | 감면 연장<br>※ 양로원, 보육원, 모자원 등은<br>무료·유료 여부 등에 따라<br>감면 재설계 |
| 사회복지시설(무료)   | 신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·재산세 50%<br>(조례 50%p 추가 可)<br>등록면허세·주민세 100%         |
| 사회복지시설(유료)   | 신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·재산세 25%<br>(조례 50%p 추가 可)<br>등록면허세·주민세 100%         |

### □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확대(특례법)

- (현행) 양육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\* 사망으로, 「민법」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 시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\*\*

\*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/ \*\* 제3자와 공동등록 한 것으로 간주



- (개선)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적용하여 양육가정 지원 유지
  - ※ 사망자의 자동차가 당초 취득 시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라도, 상속개시(사망일) 당시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적용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| 개 정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<br>공동상속 시 | 취득세 감면 제외 | 취득세 면제 적용 |

### 3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

#### 1. 지방세 제도 합리화

##### □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(지방세법)

- (현행)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\*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 추가 부담\*\*
  - \*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,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
  - \*\* 중과세율(8%)을 적용한 총세액에서 既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(10%)와 납부지연가산세(일 0.022%) 를 모두 합한 세액
- (개선)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,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 절차 마련
  -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부과

| 구분   | 현 행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일시적 2주택<br>신고 후<br>종전주택 미처분<br>※ 중과세율 적용(8%) | 별도 신고 절차 없음 |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|
|  | 과소신고가산세     | 없 음                |
|  | 납부지연가산세     | 없 음                |

##### □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(지방세법)

- (현행) 과점주주(본인+특수관계인)의 요건을 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\*



- \*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조를 준용
- (개선) 간주취득세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상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\*에 위임
  - \* (예시) 기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'생계를 같이 하는 자' 등 일부규정 명확화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간주취득세 관련<br>과점주주의 범위 |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<br>과점주주 요건 준용<br>(지방세법 §7⑤) | 「지방세법」에서 별도 규정<br>※ 향후 간주취득세 성립을 위한<br>과점주주의 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<br>명확화 |

#### □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 (지방세법)

- 담배를 직접 연구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면제되도록 면제 사유 구체화
- 세금이 납부된 담배가 제조장에 반입되는 경우, 기 납부세액을 공제·환급하고 재반출 시 납세의무가 재성립하도록 규정
  - ※ 유사 제도(개별소비세법, 주세법 등)와 과세행정 일원화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과세 면제대상                     |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              | 시험분석 또는 연구 목적 구체화<br>(신제품개발·품질개선 등)  |
| 세금을 납부한 담배가<br>제조장에 반입되는 경우 | '부득이한 사유로 반입되는<br>때' 공제·환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반입 → 공제·환급</li> <li>▪ 재반출 → 납세의무 재성립</li> </ul> |

#### □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(지방세법)

- 개인·법인분 과세표준 구간\* 조정 및 법인분 최고세율 인하(2.5%→2.2%)
  - \* 지방소득세는 국세(소득세·법인세)와 동일한 과표구간에 대해 국세의 10% 수준의 세율을 적용

| 구분      | 현 행         |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법인지방소득세 | 2억원 이하      | 1%   | 5억원 이하<br>(중소·중견기업) | 1%   |
|         | 2~200억원     | 2%   | 5~200억원             | 2%   |
|         | 200~3,000억원 | 2.2% | 200억원 초과            | 2.2% |
|         | 3,000억원 초과  | 2.5%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


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개인지방소득세 | 1,200만원 이하    | 0.6%     | 1,400만원 이하    | 0.6% |
|         | 1,200~4,600만원 | 1.5%     | 1,400~5,000만원 | 1.5% |
|         | 4,600~8,800만원 | 2.4%     | 5,000~8,800만원 | 2.4% |
|         | 8,800만원~      | 3.5~4.5% | (현행과 같음)      |      |

#### □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개선(기본법)

-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,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<br>납세의무 승계 |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<br>납세의무 승계  | 민법상 법정상속, 대습상속,<br>유언에 의한 분할상속      | 좌동<br><br>(추가) 유류분 청구로<br>상속재산 취득 시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<br>납세의무 승계 | 수유자, 상속포기자,<br>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<br>경우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감면제도 개선

#### □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(특례법)

- (현행)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·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 가능하되, 법에서 이미 규정한 감면은 추가 감면 불가\*
  - \* 감면율·감면액·세목·기간·대상·대상자 확대 불가(법 §4②1)
- (개선)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에 더하여 감면대상(물건·부동산 등)을 조례로 추가 가능

| 참고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개정에 따른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예시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유형                  | 법 규정               | 감면적용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  |
| 감면대상 추가<br>(대상 확대可) | 장애인 자동차<br>감면(§17) | 법률에 따라<br>자동차*만 감면 可<br>* 취득세, 자동차세 | 조례를 통해<br>주택* 등 他물건<br>지원확대 可<br>* 취득세, 재산세 등 |

## □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(특례법)

### ❶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(추징) 규정 마련

- (현행) 감면대상 분야의 특성상 일반적 추징규정\* 적용이 어려운 일부 감면제도에 별도의 추징규정 없음
  - \* 1년이내 직접 미사용시 또는 직접사용일부터 2년이내 매각·증여 및 임대 등 he용도 사용시 추징
- (개선) 감면 대상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별도 사후관리 규정\* 마련
  - \* (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매사업 부동산) 농업 외 목적 사용, 농업인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추징  
(관광단지용 부동산) 단지 조성계획 취소, 준공 해태,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추징  
(도시개발사업 상 체비지) 취득 후 1년 이내 분양하여 경비에 종당하지 않는 경우 추징

### ❷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사후관리(추징)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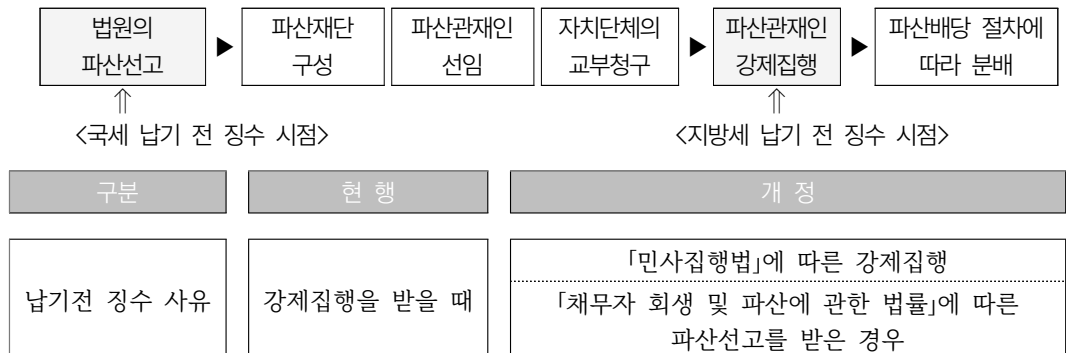
- (현행) 거주요건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, 매각·증여 시에도 해외이주, 파견근무, 부처교류 등 추징배제 사유를 폭넓게 규정
  - 他 감면규정과의 불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약화 우려
- (개선) 3년 이상 실거주 요건 도입 및 추징 배제사유 축소\*
  - \* 해외이주, 파견근무 및 부처교류 등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는 추징

## 4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### 1.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

## □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(징수법)

- 납기전 징수 사유 중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납기전 징수 시점을 국세와 일치





## □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(기본법)

- 납세자의 신청으로 세무조사가 연기된 경우, 연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
  - ※ (개시사유)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,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

| 구분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세무<br>조사 | 조사중지<br>(자치단체장 직권) | 조사재개 가능<br>※ 중지사유 소멸 시 | (좌동)   |
|          | 조사연기<br>(납세자 신청)   | 연기신청 기간 만료 시까지<br>조사유예 | 조사개시 가능<br>※ (사유) 연기사유소멸 및<br>조세채권확보 위해 필요시<br>※ 조사개시 5일전 통지 |

## □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(부과금법)

- (현행) 계약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
- (개선) 국가·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도 제출토록 확대

## 2.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

### □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(기본법)

-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'처분당사자'에서 '이해관계인'까지 확대
  - ※ 지방세입 관계법률 운영예규 규정 사항을 기본법으로 상향 입법
  -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'제2차 납세의무자\*' 및 '물적납세의무자\*\*' 또는 '보증인'을 포함
    - \* 청산인 등(기본법§45), 출자자(기본법§46), 법인(기본법§47), 사업양수인(기본법§48)
    - \*\* 신탁재산 수탁자(지방세법§119의2), 양도담보권자(기본법§75), 중증(기본법§75)

| 구분           | 현 행   | 개 정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지방세 불복청구의 대상 | 처분당사자 | (추가) 이해관계인 |

### 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(기본법)

-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및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해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경정청구 가능

| 구분          | 현 행 | 개 정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| 판결  | (추가)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 |

### □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(징수법)

- 지방세 납부방법 관련 현행 신용카드, 자동계좌이체, 현금, 증권에 직불카드, 통신과금서비스(휴대폰 소액결제)을 추가하여 운영 활성화

| 구분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방세 납부방법 | 1. 현금(계좌이체포함)<br>2. 증권<br>3. 신용카드 | (추가)<br>3-1. 직불카드<br>4. 통신과금서비스 |

### □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(지방세법)

-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,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

| 구분              | 현 행   | 개 정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| <신 설> | 종합소득분 세액이 1백만원(국세 10%) 초과시<br>※ 분납금액 시행령 위임 |
| 분납기간            | <신 설> | 2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양도소득분과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간은 국세 대비 각각 +2개월, +1개월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납부이연 효과가 발생하므로 분납규정 미운영

## III

### 추진일정

- (대상 법률: 총 5개)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법

- 향후 일정



-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발표 : 8월 11일(목)
- 입법예고(20일간) : 8월 12일(금) ~ 9월 1일(월)
- 차관회의 : 9월 22일(목)
- 국무회의 : 9월 27일(화)
- 국회 제출 : 9월 말경

## 참고 - '22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내용

1

### 지방세기본법

※ □ : 주요 개정내용(본문내용과 동일)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| 비고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(§8)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·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, 시군세 세목으로 유지</li> <li>※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</li> </ul>  |       |
|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 (§24)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·납부 등 기한이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·납부토록 규정</li> </ul>   | 국세 동반 |
|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(§38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담부증여*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·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</li> <li>*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,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 과세</li> </ul>         |       |
| ④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(§38)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척기간 규정</li> </ul>  | 국세 동반 |
| 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(§42)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</li> </ul>   | 국세 일치 |
| 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(§50)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 청구에 따른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</li> </ul>  | 국세 동반 |
| ⑦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(§56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5년~'26년 과세기간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% 감면</li> </ul>  | 국세 동반 |
| ⑧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(§63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도인·양수인의 체납세액 충당 후 양도</li> </ul>  | 국세 일치 |
| ⑨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 (§83)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천재지변 등 사유*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</li> <li>*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,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</li> </ul> | 국세 일치 |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| 비고    |
|---|---|-------|
| ⑩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(\$84의4)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된 조사범위*의 확대를 제한하되, 예외 사유**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조사대상 세목·조사기간·사유 등</li> <li>** 탈루 혐의가 여러기간, 세목까지 관련되는 경우 등</li> </ul> </li> </ul> | 국세 일치 |
| ⑪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(\$89)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(제2차 납세의무자*, 물적납세의무자**, 보증인)으로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청산인, 출자자, 법인, 사업양수인</li> <li>** 신탁재산수탁자, 양도담보권자, 중증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| 국세 일치 |
| ⑫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 명확화(\$91) |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  | 국세 동반 |
| ⑬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(\$96)             |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   | 국세 동반 |
| ⑭ 포상금의 지급 관련 인용조문 정정(\$147)             |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|       |
| ⑮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(\$147)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세법 개정사항 등*을 반영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, 시가인정액에 관한 사항,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## 2

## 지방세징수법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| 비고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
| 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(\$22)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현행) 강제집행을 받을 때 → (개선)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</li> </ul> </li> </ul> | 국세 일치 |
| ②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(\$23,\$24)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(계좌이체), 증권,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, 통신과금서비스(핸드폰 소액결제) 납부방법 확대</li> </ul>  | 국세 일치 |
| ③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(\$24의 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안부, 지방자치단체(지방세정보통신망)</li> <li>- 공매등대행기관(행정정보공동이용)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 국세 동반 |

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| 비고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
| ④ 징수유예사유 조문정비 (\$25)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유 구체적 명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쟁, 재해도난<br/>→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</li> <li>- 장기치료 →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(喪中)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|        |
| ⑤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 주체 확대(\$74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압류자산의 공매를 위해 감정인이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현황조사할 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물출입 및 체납자·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 요구 권한 명시</li> <li>- 단, 현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</li> </ul> </li> </ul> | 국세 일치  |
| ⑥ 타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용어정비(\$77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정의된 용어의 개정사항 반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정평가업자 → 감정평가법인등</li> </ul> </li> </ul>  | 법제처 권고 |
| ⑦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(\$78)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<br/>→ 7일(공휴일 등 제외)로 연장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 동반  |
| ⑧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신설(\$80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정 신설<br/>※ 공매,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등에게 매각사실 통지</li> </ul>  | 국세 동반  |

## 3

## 지방세법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(\$7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을 인용하였으나, 「지방세법」에 별도로 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「지방세법시행령」 동반개정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② 재개발사업·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(\$7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개발사업·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를 과세대상별*로 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건축물, 토지, 토지의 지목변경</li> </ul> </li> <li>○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원인을 승계취득으로 명확화</li> <li>○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,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</li> </ul> |    |
| ③ 합병·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(\$11·15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합병·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 법인(또는 주주)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일괄 유상으로 간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합병·분할에 대한 취득원인(유·무상)을 명시적 규정이 없이 판례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용 중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| 비고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④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(\$20·21)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하도록 개정</li> <li>-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⑤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의 과세면제 보완(\$54, \$56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으로 시험분석·연구용 담배의 과세면제 사유 구체화</li> </ul>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⑥ 담배 재반입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(\$53, \$63)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담배소비세가 납부된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면 세액을 공제·환급하고, 재반출 시 납세의무가 다시 성립하도록 규정</li> <li>※ '미납세반출'을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반출되는 경우로 정의한 유사 반출과세제도(개별소비세 등)와 조세행정 일치</li> </ul>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⑦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방식 적용범위 확대(\$85, \$103의37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결납세방식*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범위 확대(모회사 지분율 100% → 90% 이상)</li> <li>*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</li> </ul>   | 국세 동반<br>'24년 시행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⑧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(\$92)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(하위 2개 구간 상향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<td>1,400만원 이하</td><td>0.6%</td></tr> <tr> <td>1,200~4,600만원</td><td>1,400~5,000만원</td><td>1.5%</td></tr> <tr> <td>4,600~8,800만원</td><td>5,000~8,800만원</td><td>2.4%</td></tr> <tr> <td>8,800만원~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3.5~4.5%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과세표준             | 과세표준 | 세율 | 1,200만원 이하 | 1,400만원 이하 | 0.6% | 1,200~4,600만원 | 1,400~5,000만원 | 1.5% | 4,600~8,800만원 | 5,000~8,800만원 | 2.4% | 8,800만원~ | (현행과 같음) | 3.5~4.5% | 국세 동반 |
| 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표준  | 세율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1,2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400만원 이하  | 0.6%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1,200~4,6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400~5,000만원   | 1.5%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4,600~8,8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000~8,800만원   | 2.4%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8,800만원~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| 3.5~4.5%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⑨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(\$93)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금소득이 1,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(1.5%) 중 선택 가능</li> <li>※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</li> </ul>  | 국세 동반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⑩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(\$95)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⑪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(\$102조의2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상품(주식·채권 등)의 양도·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'금융투자소득(신설)'으로 분류하여 과세</li> </ul>  | 국세 일치<br>'25년 시행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⑫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의 과세기준 완화(\$103의3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상장주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소득세법상 '대주주'에서 같은 법상의 '고액주주'(지분율 무관,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)로 변경</li> </ul>  | 국세 동반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



| 제목  | 주요 내용  |      | 비고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---|--|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|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|
| ⑬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개선(\$103의19, \$103의34) | ◦ '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'도 그 법인의 외국법인세액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<br>※ (국세)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: 기존간접투자회사가 환급신청 → 변경투자자가 공제   |      | '25년 시행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⑭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(\$103의20)         | ◦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(2.5%→2.2%) 및 과세표준 구간 단축(4→2~3단계)   |      | 국세 동반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  | <table>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1%</td></tr><tr><td>2~200억원</td><td>2%</td></tr><tr><td>200~3,000억원</td><td>2.2%</td></tr><tr><td>3,000억원 초과</td><td>2.5%</td></tr></table> | 과세표준 |         | 세율 | 2억원 이하 | 1% | 2~200억원 | 2% | 200~3,000억원 | 2.2% | 3,000억원 초과 | 2.5% | <table>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>5억원 이하<br/>(중소·중견기업)</td><td>1%<br/>2%</td></tr><tr><td>5~200억원</td><td>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</td><td>2.2%</td></tr></table> | 과세표준 | 세율 | 5억원 이하<br>(중소·중견기업) | 1%<br>2% | 5~200억원 |  | 200억원 초과 | 2.2% |
|   | 과세표준   | 세율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  | 2억원 이하   | 1%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  | 2~200억원  | 2%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200~3,00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%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3,000억원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5%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과세표준  | 세율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5억원 이하<br>(중소·중견기업)                         | 1%<br>2%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5~20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200억원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%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  |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  |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  |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⑮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(\$103의31)           | ◦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'재해손실세액차감' 제도 신설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⑯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(\$103의32)          | ◦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특정 자산*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면제(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)<br>* 주식, 토지·건물, 회원권 등   |      | 국세 일치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⑰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(부칙 \$1)                   | ◦ 가상자산 양도·대여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('23년→'25년)  |      | 국세 동반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| ⑱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(부칙 \$12)        | ◦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(구 균등분)에 대한 가산세* 특례(면제) 적용기한을 '23년까지 1년 연장<br>* 무신고가산세, 과소·초과환급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

## 4

## 지방세특례제한법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① '직접 사용' 개념 명확화(\$2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감면대상 '직접 사용' 범위에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도록 총칙규정에 명확화</li> <li>※ 총칙 규정(\$2①) "임대는 제외" 명문화</li> </ul> |    |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②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(\$4)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,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감면 대상*을 추가하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</li> </ul> </li> <li>* (법) 장애인 자동차 감면 → (조례) 장애인 주택 감면 可</li> </ul> |    |
| ③ 한국농어촌공사 사후관리 규정 마련(\$13)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지매매사업* 등 해당 공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추징규정** 마련</li> <li>*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매도</li> <li>** 농업외 용도로 사용, 농업인 외의 자에게 매각 등</li> </ul>  |    |
| ④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 합리성 제고(\$22의2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자녀 양육자 사망시, 그 배우자 자녀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토록 요건 완화</li> <li>※ (現)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등록 시에만 감면 可</li> </ul>  |    |
| ⑤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(\$31)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대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보완</li> </ul>  |    |
| ⑥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 사후 관리 규정 마련(\$54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지 개발절차 및 기간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추징규정* 마련</li> <li>* 단지 조성계획이 취소되거나, 준공 해태, 목적외 사용 등</li> </ul>   |    |
| ⑦ 지식산업센터 사후관리 규정 강화(\$58의2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행자의 사업 유형(분양·임대·직접사용) 등을 고려, 유형별로 추징규정* 보완</li> <li>* (현행) 매각·증여·他用도 사용 → (개선) 분양 : 未분양, 임대 : 未임대, 직접 사용 : 매각·증여 등</li> </ul>  |    |
| ⑧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(\$71, \$75의3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용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, 단순 정비*</li> <li>* (\$71) 민간투자법 제2조5호 → 제2조제6호 등 (\$75의3) 국가균형발전법 → 지역산업위기대응법</li> </ul>  |    |
| 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(\$74, \$177의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특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조세체계에 맞도록 지방세법으로 이관</li> </ul>  |    |
| ⑩ 개발사업 시행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(\$74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경비에 충당을 위해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징규정* 신설</li> <li>* 체비지를 사업경비에 충당하지 않는 경우</li> </ul>   |    |
| ⑪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(\$81)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 취득 후 실거주 의무요건을 신설하고, 추징이 배제되는 예외사유 축소·정비*</li> <li>* (현행) 사망, 혼인, 정년퇴직, 해외이주, 파견근무, 부처교류 → (개선) 사망, 혼인, 정년퇴직 限</li> </ul>  |    |
| ⑫ 중복감면 배제 규정 체계 정비(\$180)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률상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던 '중복 감면' 용어를 '중복 특례*'로 명확화</li> <li>* 「지특법」 \$2에서 세율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중과세 배제 등으로 특례의 정의 규정 중</li> <li>'세목별'로 유리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

## 5

##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

| 제목   | 주요 내용  | 비고     |
|--|--|--------|
| ①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(§7의6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와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제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</li> <li>※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만 제출하도록 규정</li> </ul>  |        |
| ② 제3자의 납부 근거 마련 (§7의8)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납부 편의성 향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제3자 납부 규정 신설</li> </ul>   | 지방세 일치 |
| ③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 (§9의3, §9의4, §19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신설하고,</li> <li>강제징수 진행 중 체납자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도록 직접 규정*</li> <li>* 현재 「국세징수법」 제27조(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) 준용</li> </ul> |        |
| ④ 고액·상습체납자 수입 물품 체납처분 위탁근거 신설 (§18의2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명단공개 대상인 고액·상습 체납자*의 수입 물품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</li> <li>*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</li> </ul>  |        |
| ⑤ 체납처분 적용범위 및 법 해석의 명확화 (§19)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세징수법」의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,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하여 준용 규정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</li> <li>※ '세무서장'은 '지방자치단체의 장'으로, '세무공무원'은 '징수공무원'으로, '국세'는 '지방행정제재·부과금'으로 변경 적용</li> </ul>  |        |

## ◎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◎

### I

### 경제활력 제고

#### 1 신성장·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

#### 1.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(특례법)

##### ① 신성장·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·확대하는 이유?

-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서,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기업 R&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
- 특히, 디지털 대전환 등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소의 경우 감면을 추가 확대
- ※ (신성장·원천기술) ① 자율주행·전기차 ② 인공지능·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·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 (「조특법」 시행령 별표7)

#### 2.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 지원 확대 (특례법)

##### 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?

- 벤처기업은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잠재력 높음
- 지역별 특화지구 조성 등 벤처기업 유치 노력 장려하기 위하여, 지자체 감면 자율성을 부여

##### <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上 '육성촉진지구' >

- (개념)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·협업화를 통한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
- (절차) 시·도지사 요청 시 중기부 장관이 기반시설 등 고려하여 선정·지정
- (현황) 전국 26개 지구
  - 서울 3, 경기 5, 인천 1, 부산 2, 대구 2, 광주 2, 대전 1, 울산 1, 강원 2, 충북 1, 충남 1, 전북 1, 전남 1, 경북 2, 경남 1, 제주 1



### 3.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(특례법)

#### ①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3년이 아닌 2년 연장하는 이유?

-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가 정책 기조와 연계될 필요
  -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'24년\*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, 향후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,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'24년 정기개정 시 재검토
  - \*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('22.2월)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'25.1.1.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

#### ② 지역 경제 활성화

### 1.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(특례법)

#### ① 인구감소지역이란?

-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(시·군·구)으로서, 출생률·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\*
  - \*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 및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 등
- '21년 10월, 지자체·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9개 지역이 지정·고시된 바 있음

#### ② 인구감소지역 창업·사업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·재산세를 면제하는 이유?

-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제고하기 위한 것임
- 최근 국세도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·소득세를 면제\*하기로 한 바 있으며, (7.21. 발표)
  - \* 10년 간 소득세·법인세 100% 감면, 2년 간 50% 감면(광역시 외 인구감소지역)
- 기존 유사 지방세 감면 규정\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을 설정
  - \* 현재 과밀억제권역(산단 제외)에서 지방으로 본점·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(5년 간 100% 감면, 이후 3년 간 50% 감면) 등 지방세를 면제 증 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9조, 제80조)

## 2. 산업·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 (특례법)

### ③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?

-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물류단지 육성을 지원하고
  - 교통체증, 소음 등 물류단지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

## II

## 민생안정 지원

### I 물가 인상 요인 완화

## 1. 공공요금 안정 지원(특례법)

### ① 한국철도공사 감면 연장 및 SR 감면 신설 이유?

- 철도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등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국철도공사 감면을 연장하고 SR에 대한 감면 신설
  - 또한, SR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· 철도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## 2.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(특례법)

### ①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 공사에 대한감면 연장 이유?

- 6.19.일 발표된 「당면 민생 물가안정대책」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를 통한 농산물 긴급 수입 등이 포함되는 등,
  - 해당 공사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임
- 최근 곡물가 상승 등 고려 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해당 공사 지방세 지원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 활성화 촉진 필요



## ② 서민·취약계층 지원

### 1.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(특례법)

#### ① 사회복지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?

- 사회가 복잡 · 다변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또한 다양화 · 세분화되는 경향
-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

#### ② 사회복지시설 간 감면율을 차등 설계하는 이유?

- 무료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보장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,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\*인 점 등 감안
  - \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보장기관 등
- 한편,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공익성 등 고려하여 조례로 취득세 · 재산세를 최대 50%p 추가 감면 가능하도록 설계



##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

### ① 지방세 제도 합리화

### 1.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(지방세법)

#### ①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유는?

- 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취지에 맞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
  -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조세 운영\*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선하는 것임
    - \* 일반적으로 비과세, 과세면제, 경감을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,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없음(법820③)
  - ※ (사례)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(예 공실),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·납부



## 2.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(지방세법)

### 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?

- 현행 간주취득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개념은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나,
  - 간주취득세 제도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목적이 달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개념을 「지방세법」에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

## 3.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(지방세법)

### 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취지는?

-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, 국세인 소득세·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음
  - 또한,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,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국세의 10% 수준의 세율\*로 부과하고 있음
    - \* (소득세) 6~45% → (개인지방소득세) 0.6~4.5%
    - (법인세) 10~25% → (법인지방소득세) 1~2.5%(최고세율은 현행법 기준)
- 정부는 '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·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, 법인세 최고세율도 25%에서 22%로 인하할 계획임
  - 서민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취지를 고려하여,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폭으로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것임

## 4.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(지방세법)

### ① 과세 면제 구체화로 면제 대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?

- 현행 규정이 담배를 직접 연구하지 않는 시험분석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(예: 자동차 화재실험에 담배가 사용되는 경우 등)까지 과세가 면제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면제 사유를 구체화\*한 것임
  - \* 담배의 품질개선, 신제품개발, 성능인증, 성분분석 등



## 5.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개선 (지방세기본법)

### ①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개선하는 이유는?

-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수유자\*상속포기자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뿐만 아니라,
  -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\*\*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
- \*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
- \*\*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/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
- ※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= 상속재산총액 - (상속부채총액 + 상속세액 및 취득세)

### ② 감면제도 개선

## 1.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(특례법)

### ①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?

-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
  - 지역특화산업 유치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조세 감면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
- '20년 결산 기준 조례 감면액이 총 감면액의 약 5.4%에 불과\*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활용률이 저조함에 따라,
  - \* 총 감면액 6조 2,740억원 중 법정 감면 5조 9,353억원(94.6%), 조례 감면 3,387억원(5.4%)
- 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방세 지출 정책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

## 2.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(특례법)

### 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문 필요한 이유?

- 지방세 감면은 법률상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, 특정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
- 따라서, 당초 감면목적에 위배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

### ②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배경은?

- 특별공급 제도 등과 관련,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근무지 변경 후 매각하는 사례 등 발생
- 실거주 요건 도입 및 추정 사유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할 필요

### ③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달라지는 점은?

- '23. 1. 1.이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,
  - 사망, 혼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이상 상시 거주 의무 발생
  - 위반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

## IV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### 1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

#### 1.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 (징수법)

##### ① 강제집행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를 개정하는 이유?

- 국세의 경우, 납기 전 징수사유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등이 시작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규정
- 반면, 지방세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 납기 전 징수 시점이 국세보다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국세와 동일하게 납기 전 징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

##### ②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은 없는지?

-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 받은 자의 남은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
  - 자치단체가 납기전 징수사유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음
- 납기전 징수를 통해 지방세 채권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, 파산된 채납자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청산한 후에도 지방세 체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



- 따라서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
- ※ 청산 후 다른 부채 등은 탕감될 수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은 감액되지 않음

## 2.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(기본법)

### ③ 세무조사 개시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?

- 천재지변이나 화재·질병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중으로,
- 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토록 개정하여 지방 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

## 3.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(부과금법)

### ④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이유?

-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,
-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납부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액이 있더라도 대금 수령이 가능함
- ※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,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제출
-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확대하여,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에 기여

## ②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

## 1.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(기본법)

### 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?

-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'처분 당사자' 외에도 '이해관계인'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

2차 납세의무자, 물적납세의무자, 보증인을 포함토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익 신장

## 2.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(기본법)

### 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이유는?

- 과세표준·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토록 정하고 있음
  -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신장

## 3.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(징수법)

### ③ 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를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추가한 이유?

- 직불카드의 경우 현재도 위택스, 은행 ATM기,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,
- 일부 자치단체(경기, 부산 등)에서 납부편의 시책의 하나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납부를 하고 있으나,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완하고자 함.

### ④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는?

- 현금(계좌이체 포함), 신용카드, 증권\*으로 납부가 가능함
  - \* 「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으로 수표, 우편소액환증서 등

### ⑤ 납부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\*(간편결제)을 추가할 계획은 있는지?

\* 전자자금이체, 직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전자지급수단, 전자화폐, 신용카드 등

- 전자지급수단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납부수단 확충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
- 결제수수료, 이용금액 한도 등의 문제와 선불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예탁금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이후, 안정성 확보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



#### 4.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(지방세법)

##### 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?

-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,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,
  -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초래
- 개인지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

##### ②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도입하는 이유는?

-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(양도소득세·법인세)보다 신고·납부 기한\*이 길어 납세자 부담이 적은 반면,
  - \* (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)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+2개월  
(법인지방소득세) 법인세 납부기한 +1개월
-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·납부기간(5.1.~5.31.)이 소득세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달리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,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

####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| 통 화 명                 | 8월 11일(목) | 8월 12일(금) | 8월 16일(화) | 8월 17일(수) | 8월 18일(목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미 달 러 (USD)           | 1309.10   | 1302.50   | 1303.10   | 1309.60   | 1309.80   |
| 일 본 엔 (JPY)           | 985.29    | 979.21    | 979.22    | 975.46    | 969.32    |
| 영 국 파 운 드 (GBP)       | 1599.26   | 1588.66   | 1571.08   | 1584.62   | 1578.24   |
| 캐 나 다 달 러 (CAD)       | 1024.78   | 1020.25   | 1009.65   | 1019.66   | 1014.13   |
| 홍 콩 달 러 (HKD)         | 166.84    | 166.06    | 166.26    | 167.01    | 167.00    |
| 위 안 화 (CNH)           | 193.55    | 193.28    | 193.31    | 192.58    | 192.92    |
| 유 로 화 (EUR)           | 1348.57   | 1344.51   | 1324.34   | 1332.13   | 1332.98   |
| 호 주 달 러 (AUD)         | 927.43    | 924.91    | 914.91    | 919.73    | 908.22    |
| 싱 가 폴 달 러 (SGD)       | 956.35    | 950.76    | 945.41    | 949.95    | 948.00    |
|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 | 293.72    | 293.03    | 292.21    | 293.24    | 293.15    |